

2023 예산 · 정책 이슈

Budget · Policy Issue

이번달 주제 : 간주처리 예산 제도

- 간주처리 예산
- 간주처리 예산 vs 성립전 예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 2023년 충청남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계획 및 검토사항
- 간주처리 예산_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정책 동향

-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기경위)
- 영국 친환경도서관주간과 도서관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 (행문위)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체계 강화 (복환위)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설 (농수해위)
-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건소위)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교육위)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11월말 기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I. 이번달 주제: 간주처리 예산 제도

- ① 간주처리 예산
- ② 간주처리 예산 vs 성립전 예산
- ③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 ④ 2023년 충청남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계획 및 검토사항
- ⑤ 간주처리 예산_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1. 간주처리 예산

■ 개념

- “간주처리 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임
- 간주처리예산은 최종 추경성립 이후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어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됨

■ 특징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으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사항이 표기될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동의되는 사항
-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이월 가능.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간주처리와 함께 의결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간주처리에 포함된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제약
- 간주처리 예산은 원칙상 시기적으로 연도 말 최종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할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최종 추경예산안 총칙에서 간주처리 규정을 두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간주처리는 연도 말에 국비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거나 내시는 되는 경우에 활용됨

2. 간주처리 예산 vs 성립전 예산

■ 비교

- (공통점) 사용용도 지정 및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의존재원, 교부된 경비는 의회에서 삭감이 불가함
-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근거에서 볼수 있음. 간주처리 예산는 법적용어가 아닌 반면 성립전 예산은 법적 용어임.
 - 또한, 시기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연도말 최종 추경편성 이후 발생하나, 성립전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및 추경 예산 편성전 발생함.

〈간주처리 예산 VS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구 분	간주예산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비 고
근 거	□ 법적 근거없음 ※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재정법 제45조	
절 차	□ 예산 선집행⇒사후보고 □ 최종 추경예산 예산총칙으로 사전 승인	□ 예산 선 집행 ⇒ 추경편성 ⇒ 의회 예산심사	
시기/원칙	□ 최종 정리 추경 편성 후	□ 추경 편성 전	
추경편성	□ 간주처리(추경 편성 안함)	□ 추경 편성	
의회보고	□ 사후보고(일부보고, 일부보고 규정 없음)	□ (사전보고) 없음	
의회삭감	□ 불가	□ 불가	*의회권한 침해
의회동의	□ 사전동의(승인) 형식	□ (사후 동의) 의무적	

3.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 간주처리 예산 처리기준 배경

-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상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 지방예산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함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행안부 지침

-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 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 지방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
 - ※ 처리기준
 - 최종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
 -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 보고
 -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

4. 2023년 충청남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계획 및 검토사항

■ 간주처리 예산개요

- (근거) 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행안부 '05.4.21.)
 - * (교부된 경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방법)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간주처리 후 의회에 간주처리 내용 보고*
 -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후 간주예산 반영
 - ※ 구제역 및 렴피스킨 예방지원 15억원, 반대 방제대책비 2억원 등
 - * (간주처리 보고) 의회 권한사항 /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이월 가능
- 향후 일정
 - 간주처리 예산편성 요구 및 심사('23. 12. 18. ~ 12. 31.)
 - 간주처리 예산 확정('23. 12. 31.)
 - 간주처리 예산 보고('24. 1 ~ 2월 / 도의회 업무보고 시)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16/14,777	10/ 16,512	9/ 16,242	20/ 15,367	18/ 7,681	20/ 18,084

※ 관련 자료: 예산담당관. - 17893(2023.12.13.)

■ 검토 사항

- [사전적 측면] 간주처리 예산 중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여부
 - [사후적 측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 보고 준수 여부
- ⇒ '24년 1월중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자료요구를 통해 검토 계획

5. 간주처리 예산_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 [진주시의회] "시의 간주예산 처리에 무리수"

[경남뉴스] _ 2023. 11. 29.

- ▷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간주예산 처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시의회는 시에서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했고, 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
- ▷ 의원들은 간주예산으로 무리하지 말고 대신에 내년 추경을 앞당기자고 주장. 신서경 의원은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12개 사업 80억원 정도를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하면 나중에 보고만 하겠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며 "무리수"라고 지적
- ▷ 최민국 의원은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년 1차 추경 시기를 앞당기는 요청에 하는 게 맞다"라며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도 추가 편성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 ▷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12개 사업의 시비 매칭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12개 사업 중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최근 금산경로당 건립 당시 시비 매칭으로 완성됐다"라고 덧붙임
- ▷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내년 예산 사정 및 사업의 조기 집행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간주 예산을 처리하게 됐다며 시의회의 이해를 구함. 특히 내년 하반기 추경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늦어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
- ▷ 시에 따르면 간주예산의 처리 절차는 간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 부서에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 처리를 요구. 이후 예산 부서는 간주 처리 승인 여부를 검토해 사업부서에 승인 내역을 통보하고 의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

■ [서천군의회] "간주예산처리 개선방안 제시"

[충청뉴스 / 조흥기] _ 2021. 1. 28.

- ▷ 김아진 의원은 “연말 예산심의 후 교부된 보조금 등 국도비에 대한 간주예산처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의 없이 추진되고 사후 보고되어 왔다”고 지적
- ▷ 특히, 김아진 의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연말에 뒤늦게 선정된 보조금 사업은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심의해야 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
- ▷ 이어 “앞으로는 간주예산처리에 대해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함

Ⅱ. 정책 동향

- ①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기경위)
- ② 영국 친환경도서관주간과 도서관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행문위)
- ③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체계 강화(복환위)
- ④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설(농수해위)
- ⑤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건소위)
- ⑥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교육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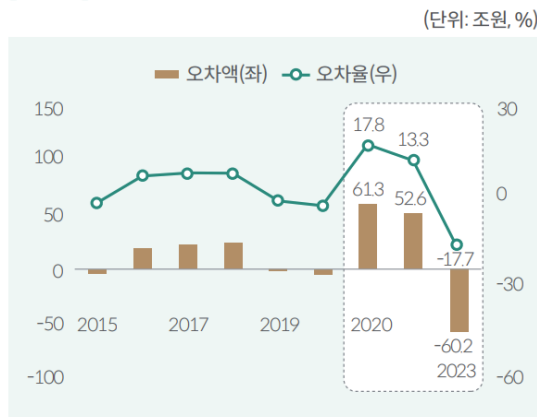
1.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의 세수 오차 현황

○ 최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세수입 전망오차가 커짐에 따라 재정운용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

- 2021년 및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호조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등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
- 반면, 2023년에는 그동안 세수 증가를 견인해온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진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업영업 실적의 급격한 감소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
- 2023년 세수부족 규모추정치:(정부)59.1조원 vs. (NABO)60.2조원

[그림 1]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



주: 1) 세수오차액은 (본예산-결산), 세수오차율은 오차액/결산x100(%)로 계산

2)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 2023년 세목별 세수오차 추정치

(단위: 조원)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		
	정부 추정	NABO 추정
총국세	△59.1	△60.2
소득세	△17.7	△17.7
- 양도소득세	△12.2	△12.3
법인세	△25.4	△25.9
부가가치세	△9.3	△8.8
기타	△6.7	△7.7

주: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10.

■ 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 2023년 세수결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생
 - 2023년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에서 법인세(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43.1%)와 양도소득세(20.5%)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63.6% 수준
 - 한편, 정부 재추계 결과('23.9.)에서도 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63.7%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기인
-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
 - 법인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세 증가를 견인하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들어 거래량과 매매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

[표 2] 부동산 매매가격 및 매매량 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가격지수	주택	7.5	4.8	1.2	△4.7	△8.0	△8.8	△7.6
	토지	4.1	4.0	3.7	2.7	1.8	0.9	0.4
거래량	주택	△50.6	△44.5	△49.0	△49.9	△13.8	△11.5	1.4
	토지	△34.1	△31.4	△35.3	△37.8	△26.7	△24.7	△18.0

주: 1) 가격지수는 매분기 말의 전국평균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21.6.=100) 및 지가지수('22.10.=100) 기준

2) 거래량은 주택 및 토지의 매분기말까지의 누적 매매거래량을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및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은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원) 대비의 6.0조원(1.6%) 낮을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전망은 2023년 전망(340.3조원) 대비 21.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우리 경제는 2023년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2023년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3년 NABO 전망 (A)	2024년 정부 예산안 (B)	2024년 NABO 전망 (C)	전년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340.3	367.4	361.4	21.1	6.2	△6.0	△1.6
소득세	114.2	125.8	124.8	10.7	9.3	△1.0	△0.8
- 양도소득세	17.4	22.4	21.1	3.8	21.6	△1.3	△5.7
법인세	79.1	77.7	75.0	△4.1	△5.2	△2.7	△3.5
부가가치세	74.4	81.4	81.1	6.7	9.1	△0.3	△0.4
기타	72.6	82.5	80.5	7.8	10.8	△2.0	△2.4
- 기타 소비세수 ¹⁾	35.5	44.2	43.4	8.0	22.4	△0.7	△1.7
- 기타 자산세수 ²⁾	37.2	38.3	37.0	△0.1	△0.4	△1.3	△3.3

주: 1)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를 포함

2)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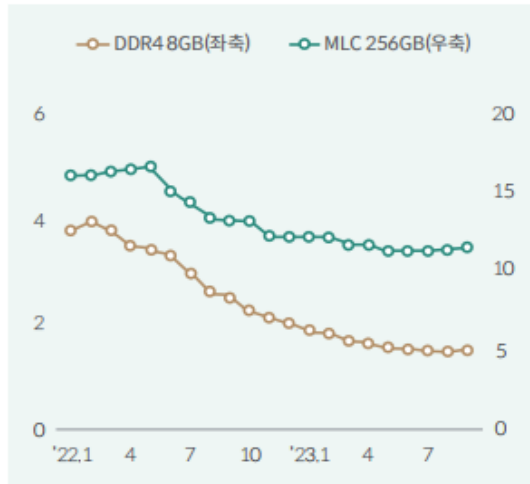
1.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10.

- 정부 예산안(367.4조원)보다는 6.0조원(△1.6%)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기인
 -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국회예산 정책처는 법인세를 정부예산안 대비 2.7조원(△3.5%) 낮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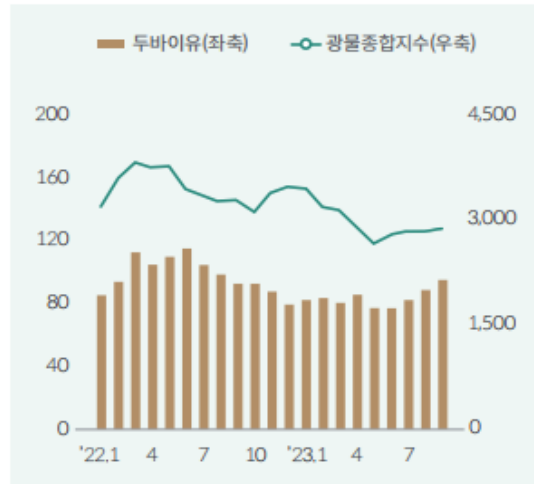
[그림 3] 반도체 가격 추이

(단위: 달러)



[그림 4] 원유 및 광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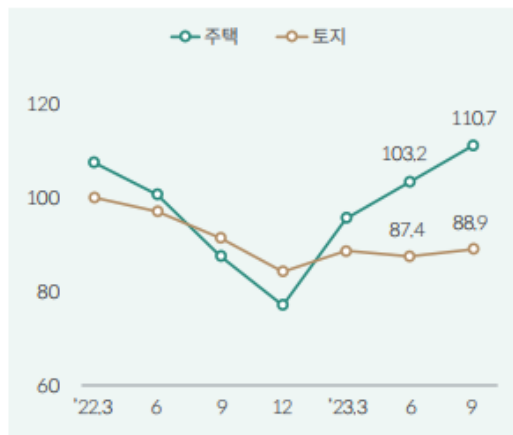
(단위: 달러/bbl, 2016=1000)



자료: (반도체) DataGuide, (원유 및 광물가격)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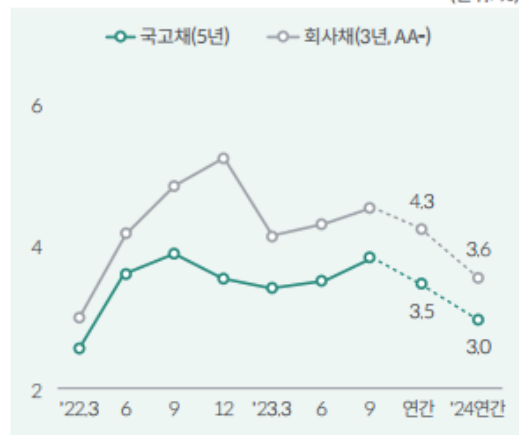
-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수요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3조원(△5.7%) 낮게 전망

[그림 5]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추이



[그림 6] 금리 실적 및 전망 추이

(단위: %)



주: 1)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시장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2) 금리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23.10.) 기준

자료: 통계청,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한국은행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자료

- 또한,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의 전망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

[표 4]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24년 기준

(단위: %)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통관수출 증가율	통관수입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A)	4.2	2.0	2.2	7.2	5.7	3.0
정부(B)	4.9	2.4	2.2	8.8	3.0	3.8
차이(A-B)	△0.7	△0.4	0.0	△1.6	2.7	△0.8

주: GDP 구성요소의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 만약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 할 필요

-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기하방 요인 존재
-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 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NABO FOCUS 제67호]

2. 영국 친환경도서관주간과 도서관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

영국에서는 매해 10월 첫째 주 도서관주간(Libraries Week)에 영국 전역에서 도서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리는 행사들을 개최한다. 올해의 도서관주간은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도서관주간(10/02~08)으로 정하고, 영국 내의 도서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동에 주목했다.



그림 1. 친환경도서관주간(출처: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 친환경도서관파트너십 프로젝트
- 영국 전역의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모든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의 친환경 실천운동(Go Green at the library)’을 진행
- 친환경도서관주간 인터랙티브 지도(interactive map)를 만들어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이고 신나는 친환경 행사와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안내

■ 친환경도서관파트너십(Green Libraries Partnership)

- 잉글랜드의 도서관과 지방 정부들이 출범시킨 기후변화대응 장기 프로젝트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결과로써 2022년 2월에 출범한 친환경 도서관파트너십은 학습과 영감, 도서관계 안팎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후변화의제를 지원하고자 도서관계를 하나로 결집

- 영국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가 주도하고 영국도서관장협회(Libraries Connected),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와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이 후원하는 이 파트너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1단계 기금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온라인 허브를 개발하고, 기금을 제공하고, 제1차 친환경도서관 콘퍼런스(Green Libraries Conference)를 진행함

■ 친환경도서관캠페인(Green Libraries Campaign)

○ 데이터 중심의 기반 구축

-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범분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 각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들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지원
-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도서관에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와 기후 행동의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 기반 확장

○ 기금

- 2022년도 친환경도서관기금(Green Libraries Grants Fund 2022)은 잉글랜드 지역 내 공공도서관들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 기금을 제공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 책임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관/컨소시엄 당 최대 2,500파운드까지 신청
- 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도서관캠페인은 최근 스폰서십 캠페인을 출범

○ 친환경도서관 콘퍼런스

- 친환경도서관파트너십은 2023년 3월에 제1차 친환경도서관 콘퍼런스를 주최하고 지난 1년 여간 도서관계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친환경 사업들을 소개
- 도서관과 지방 정부에서 온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런던의 웰컴컬렉션(Wellcome Collection)에 모여 환경 교육과 인식 개선, 도서관의 고유한 위상에 대해 논의

○ 친환경 행사와 활동

- 드로일스덴도서관(Droylsden Library, 그레이터 맨체스터):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모델링 공예 워크숍
- 라임레지스도서관(Lyme Regis Library, 웨스트 도르셋): 지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배우기, 친환경 서약 포스터 만들기, 도서관 정원에 수선화와 크로커스 구근 심기
- 캠브리지중앙도서관(Cambridge Central Library): 기후 전문가 조나단 그레고리(Jonathan Gregory) 교수와 함께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변화에 관한 행사
- 타토히스도서관(Thatto Heath Library, 머시사이드): 타토히스 공원 산책과 가을을 주제로 한 공예 수업
- 팻참도서관(Patcham library, 브라이튼)의 야생동물정원 워크숍: 프로그라이프(Froglife)와 함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 알아보고 야생동물을 위한 정원을 가꾸는 방법 배우기

■ '살아있는 지식네트워크(Living Knowledge Network)'를 통한 친환경 사업 도서관 사례

○ 물건 도서관(Library of Things)



사진 1. 물건 도서관(출처: 영국국립도서관)

- 영국의 많은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전통 공구도 대여
- 재봉틀, 손수레, 전지 가위 등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여해주는 킬번도서관(Kilburn Library)(사진1)
-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응집성을 높이는 것
- 런던 및 런던 외 지역의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물건 도서관운영 확대 중

○ 캠브리지와 뉴욕 엽서 교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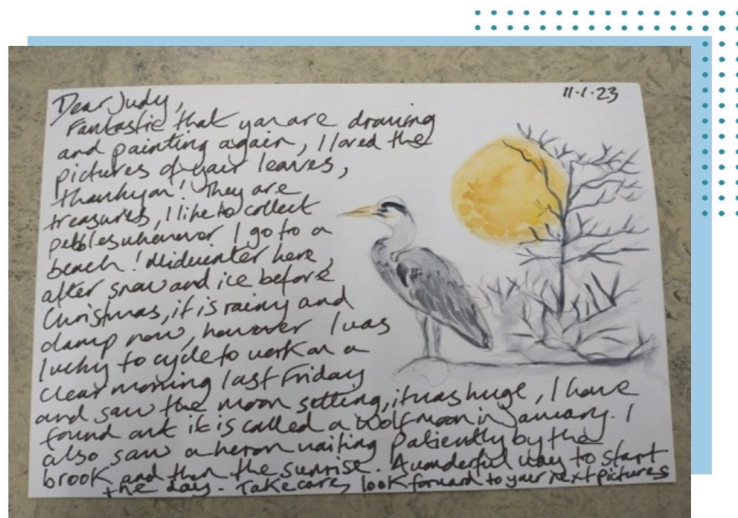


사진 2. 캠브리지와 뉴욕 엽서 교환 프로그램(출처: 영국국립도서관)

- 사진은 미국 뉴욕주의 브롱스에 사는 주디와 영국 캠브리지에 사는 애비게일, 두 여성이 1년간 교환한 엽서로 이들은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Cambridge University Library)과 캠브리지셔도서관(Cambridgeshire Libraries) 및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ies)이 진행하는 '네이처 익스체인지(Nature Exchange)' 프로젝트에 참여
- 이 프로젝트는 찰스 다윈이 시작한 전 세계 편지교환 네트워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다윈은 전 세계 2,000여 명의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서 관찰한 내용을 수집하였음
-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다윈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사는 곳의 계절 변화와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교환함

○ 글래스고 비즈니스IP센터(Glasgow Business & IP Centre)



사진 3. 글래스고 비즈니스IP센터(출처: 영국국립도서관)

- 글래스고의 미첼도서관(Mitchell Library)을 포함하여 영국 전역에 21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IP센터(Business and IP Centre, BIPC) 네트워크는 처음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은 순간부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출범시키고 키워나갈 때까지 사업가와 혁신자들을 지원함
- 글래스고 BIPC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주제들에 대한 기초 강좌를 제공하는 ‘러닝 런치(Learning Lunches)’를 운영
- 이 ‘러닝 런치’ 시리즈에는 기업가와 소비자가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포함
- 글래스고 BIPC는 창업 관련 법률과 지원 서비스,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줄이는 방법,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혁신 기술 등 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을 지원

○ 웨이크필드도서관(Wakefield Libraries)



사진 4. 웨이크필드도서관 자전거 수리센터(출처: 영국국립도서관)

- 웨이크필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CILIP 친환경도서관 기금(Green Libraries Grant)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
- 웨이크필드도서관은 12개 분관 모두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전거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씨앗도서관,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마을 텃밭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 캠든의 스위스코티지도서관(Swiss Cottage Library)



사진 5. 스위스코티지도서관(출처: 영국국립도서관)

- 스위스코티지도서관은 바실 스펜스(Basil Spence) 경이 설계하여 1964년에 개관한 2등급 지정 보존 건축물로서, 런던의 전후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노후하여 캠든 의회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가 되었음
- 그러나 공공부문 탈탄소화 기금(Public Sector Decarbonisation Scheme)으로 단열 창문과 에너지 절감형 조명,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여 지속가능성이 향상됐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으며, 고유한 건축양식을 보존하면서도 미래에 보다 잘 준비된 도서관으로 탈바꿈. 캠든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할 계획

■ 증가하는 영향력과 협력의 힘

- 도서관은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을 독려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기관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
- 영국의 친환경도서관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협력기관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도서관국립도서관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가 새로운 멤버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대학도서관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강력한 연계를 맺게 되었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 하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 친환경도서관주간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도서관의 노력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큼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월드라이브러리 국외소식] 재작성

(원문출처)

<https://dcmslibraries.blog.gov.uk/2023/10/02/green-libraries-week/>

<https://dcmslibraries.blog.gov.uk/2023/10/05/the-green-libraries-partnership/>

<https://blogs.bl.uk/living-knowledge/2023/10/sustainability-schemes-in-libraries-across-the-uk-1.html>

3.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체계 강화

■ (현황) 중증정신질환자의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흥기난동사건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흥기피습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라는 공통
 - * 중증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양극성 성격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증 및 재발성 우울증 등을 포괄
 -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범죄자의 2.26%(경찰청 통계연보, 2022)
 -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가 큰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아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의 예방 필요
 -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
- 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나 ‘외래치료명령제’의 내실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검진 체계 강화·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중
 - 2023년 8월 17일 정부에서 밝힌 ‘묻지마 범죄 관리 감독대책’에서는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의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담겨 있음

■ (쟁점)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충분한 치료·관리·재활 부족,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감소 추세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돌봄 부담이 환자 가족에 전가

-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입원·외래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2021년 기준)로, 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보건복지부 외, 2022)
-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보건복지부 외, 2022) 퇴원 후 재입원·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가 상당수에 이름
- 한편,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전국 71,373명(경기도 15,662명)이며,
 -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재활시설 등록자는 전국 93,522명(경기도 24,233명)인 반면 실제 이용자는 전국 36,391명(경기도 5,54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022)

○ 정신질환치료 수진자와 정신응급환자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정신의료기관 병상과 입원 환자는 감소 추세

-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수는 5,152명('21년 기준)으로 증가 추세
- 정신응급환자 추정군은 2014년 64,825명에서 2019년 84,507명으로 30.4% 증가
- 특히, 10대~20대 환자는 2014년 14,452명에서 2019년 26,274명으로 81.8% 증가, 청년층 정신응급환자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2023)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 병상 및 입원환자 수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67.

-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증정신질환자의 41.8%는 의료기관 퇴원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지속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치료 및 재활기관 확충 필요
 - 전국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평균 26.6명으로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

■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기관 현황

기관명	구분 주요기능	기관수(개소)	
		전국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261	38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58	9
정신재활시설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349	60
정신요양시설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59	6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2,086	447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 정신건강사업 안내".

■ (해외사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치료체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고 재입원 방지

- 영국은 지방정부에서 주거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회복을 독려하고 비자의입원의 반복을 방지
 - 영국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에게 주택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제도를 운영
 - 지원주택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지원, 지원주택 및 공동주택·단기 주거 지원으로 구분되며, 가정에서의 지원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은 유동지원, 지역사회돌봄, 가사도움으로 구성됨
 - 정신질환 초기치료는 국민건강서비스(NHS) 일반의가 수행하고 이후 장기적 서비스 필요시 지방정부의 사회보호 서비스 제공

- 케어 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 정신질환자의 회복 지원 및 비자의 입원을 방지할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회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

○ 미국에서 ACT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을 돕고 있음

-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 빈도를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 제고 및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CT 프로그램 참여시 다학제적 서비스 팀이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보장
- 미국에서는 ACT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준수, 치료 만족도 향상, 입원을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ACT 프로그램의 효과는 특히 정신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좋은 것으로 알려져우리나라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시사점) 정신의료기관 병상은 중증정신질환자 우선으로 운영하되,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치료 체계’를 확립할 필요

- 해외에서는 탈원화와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서비스를 구축
- 지낼곳이 없어 입원하는 만성적 입원이 아닌 응급 및 최중증환자 우선으로 입원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들은 가정과 지역에서 치료·관리 및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립 필요

■ (정책제언) 중증정신질환 대상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급성기 입원 절차 개선, 퇴원환자 사례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치료를 위한 도내 낮병원 설립 및 정신재활시설 확대 필요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입원 요건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및 퇴원 환자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방문관리 시범사업, 집중사례관리서비스 확대 필요

- (행정입원 요건 간소화) 급성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하도록 행정 입원시 전문의 2인의 일치 소견인 현재 정신건강보건법 제44조를 개정하여 1인의 소견으로 축소해 행정입원 요건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
- (방문관리 시범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료체계 미비로 가족돌봄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 환자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

- (ACT 프로그램 도내 전 지역 확대) 현재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ACT(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

○ 퇴원 이후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정신재활시설 확대,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완화 필요

-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확대) 도 차원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설립하여 병원 입원과 사회복귀의 중간 단계로 기능하며, 환자들이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일 필요
- (정신재활시설 확대)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
-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완화) 최근 10~20대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의 치료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알릴 필요

출처 : 경기연구원 [이슈브리프 23.9.1(금)] 재작성

4.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설

■ 엘니뇨(El Niño)와 폭설

- 2023~2024년 겨울, 중강도 수준의 엘니뇨 발생으로 한반도 폭설 및 기습 한파 우려
 - 2023년 6월 8일, 미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엘니뇨를 고시, 11월 20일 발표에서 2024년 봄까지 엘니뇨가 지속될 가능성이 62%에 이른다고 발표
 - ※ 엘니뇨란 적도 부근 중·동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아지는 기후변동 현상으로, 2~7년 주기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발생 시 전 세계에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함
- 엘니뇨는 한반도에 수증기가 많은 남풍 유입 가능성을 높여 평년 대비 높은 강수·강설량 예상
 - 가장 최근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2016년 1월, 제주는 32년 만에 폭설이 내려 항만이 폐쇄되며 섬이 고립되었고, 울릉도는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으며, 충남과 호남에도 30cm 이상의 눈이 내림.
 - 엘니뇨에 기인하진 않았으나 폭설로 인한 농업 부문의 가장 큰 피해는 농업 시설물(축사, 시설원예 등)에 2004년(3월 중부 대폭설) 6,558억 원, 2005년(3월 동남권 폭설, 12월 호남권 폭설) 4,9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 농업분야 폭설 대응 및 지원제도

- 대비 미비 시 폭설 발생은 농업부문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경각심 고취 필요
 - 2004년과 2005년의 예를 보듯이 폭설로 인한 피해는 주로 경각심이 낮아지는 초겨울과 늦겨울에 발생함.
 - 따라서 겨울철에는 항상 폭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폭설 대응책은 시설물(가축, 원예)을 중심으로 4단계 체계화
 - 농업 부문 폭설 대응책과 지원책은 사육시설과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대응, 특보발령 시 대응, 피해 발생 시 대응, 사후 지원으로 4단계 체계화

- 사전 준비 시, 폭설에 대한 대응 리플릿을 배부함.
 - ▶ (시설하우스) 사전점검 및 고정끈 설치보강 등
 - ▶ (인삼시설 및 과원) 차광망, 과원 방조망 및 배수로 정비 등
 - ▶ (가축 및 축사) 축사시설 지주 보강 및 안전 점검, 폭설 대비 1주일분의 사료 확보 등
- 폭설 특보발령 시, 폭설 예정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SNS, 마을 방송 및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 기상 상황과 피해 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함
 - ▶ (행동요령)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 쌓인 눈 제거, 시설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및 가축 이동 후 미지근한 물 공급하여 저온 피해 발생 예방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복구를 위해 농업계 유관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인력·자재 지원 및 현장기술지원을 추진
 - ▶ 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저온 피해 우려 시 소형터널 설치 및 파손된 축사 지주 보강 등 응급 복구 실시
- 사후 대응으로는 재난지원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손해평가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가축·농작물재해보험금, 풍수해보험금,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

<표> 농업 부문 폭설 대응책

구분	대응책	세부 대책
사전준비	폭설 대응 리플릿 배부	• 원예 시설물: 시설하우스 사전점검 및 고정끈 설치 및 보강, 인삼재배시설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 및 배수로 정비 • 가축 및 축사: 축사시설 지주 보강 및 안전 점검, 폭설 대비 1주일분의 사료 확보
폭설 특보발령	기상 상황과 피해 예방 행동요령 전파	• 시설하우스 보강지주 2~6m 간격으로 설치 • 시설물 위에 쌓인 눈 제거 • 시설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및 가축 이동
피해 발생	농업계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응급 복구 지원	•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 피해 최소화 • 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저온 피해 우려 시 소형터널 설치 • 정전, 온풍기 고장 시 양초 등으로 응급조치
사후 지원	가축·농작물재해보험금, 풍수해보험금 및 재난지원금 조속히 지원	• 신속한 손해평가로 재해보험금 지급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설 복구비 지원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이슈플러스 제9호(2023. 12. 5)

5.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 건설투자는 생산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함. 또한 정부의 건설투자는 경기 위축 대응 수단으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

○ 예산에서의 시설사업비

- 예산 체계는 분야 및 부문을 기준으로 구분된 '기능적' 분류체계임.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체계는 세입 또는 세출이 가진 '성질'에 의해 '통계목'이라는 분류 기준을 활용한 또 다른 구분이 가능함
- 특히, '통계목'을 통해 세부사업을 형식적인 하나의 세출 단위가 아니라 세부사업이 집행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
- 시설사업비는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
- 시설사업비에 부합되는 통계목은 중앙정부의 경우 건설보상비(410)와 건설비(420)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401)임

○ SOC예산과 시설사업비

- SOC 예산과 시설사업비는 SOC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 중 규모가 큰 세부사업에 배정된 세출예산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SOC 예산과 시설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SOC 예산과 시설사업비의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특정 세부사업이 SOC 분야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세부사업에 배정된 세출예산이 모두 시설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SOC 예산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현액 20억원 중 10.1억원이 집행되었는 바(집행잔액 9.9억원 발생),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6.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인 3.5억원은 ‘전산개발비’로 지출되었음

- SOC 예산으로 분류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현액 5.6억원 중 5.6억원이 모두 집행되었는 바(집행잔액 미발생), 전체 예산 중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음
- SOC 예산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출연금, 출자금 등 하나의 기반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행위가 발생되기 이전 구상단계의 비용부터 포함되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산단, 물류 등의 시설물에 국한됨
- 따라서, SOC 예산과 함께 시설사업비에도 초점을 두어,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량 규모와 재정 건설투자의 정책 방향을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정부 예산 현황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액(최종예산 총계기준)은 연평균(2010~2022) 7.7%씩 증가하여, 2022년 482.6조원에 이르고 있음. 2022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총예산의 32.8%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SOC 분야(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합계액)의 예산액이 총예산의 14.2%를 점유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예산액의 분야별 연평균(2010~2022) 증가율을 살펴보면(예비비 제외), SOC 분야의 증가율은 타 분야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연평균 4.4%)
- 또한, 분야별 예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2022)를 살펴보면, SOC(20.8%→14.2%)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2.0%→11.4%), 교육(4.4%→3.7%), 문화 및 관광(5.1%→4.2%), 농림해양수산(8.0%→6.8%), 과학기술(0.2%→0.1%) 분야 등 하락 추세를 보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그 추세가 매우 급격함
- SOC 예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시설사업 예산(통계목코드: 401)은 연평균(2010~2022) 4.26%씩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

시설사업 예산액 추이(2010~2022)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2022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시설사업 예산액	40.9	20.6%	41.4	15.3%	54.5	12.7%	60.8	13.3%	64.7	13.4%
전체 예산액	197.9	100%	270.4	100%	428.7	100%	457.7	100%	482.6	100%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시설사업 예산액은 지방재정 통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401)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지방정부 결산 집행 현황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결산액(최종예산 총계기준)은 연평균(2010년~2021년) 7.97%씩 증가하여 2021년 433.5조원에 이르고 있음
- 결산액의 분야별 연평균(2010년~2021년) 증가율을 살펴보면(예비비 제외), 예산액에서와 마찬가지로 SOC 분야의 증가율이 타 분야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한편, SOC 결산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시설사업 결산(통계목코드: 401)은 연평균(2010년~2021년) 3.01%씩 증가하였으나,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시설사업 결산액 추이(2010~2021)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시설사업 결산액	39.4	21.1%	36.2	15.0%	54.2	13.3%	54.6	12.6%
전체 결산액	186.5	100%	245.1	100%	408.6	100%	433.5	100%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시설사업 결산액은 지방재정 통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401)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예·결산 차액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결산 차액을 살펴보면, SOC 분야는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 등과 함께 예·결산 차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예비비 제외)

- 2020년 기준, SOC 분야는 전체 예·결산 차액의 13.3%를 점유하여, 환경보호(19.3%) 및 사회복지(13.7%)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결산 차액을 야기
- SOC 분야 예·결산 차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예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결산이 지출되었음

지역별 SOC 분야 예·결산 차액 및 비율 (2010~2021)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984 -7.3%	-3,861 -9.7%	-4,565 -10.6%	-3,560 -8.5%	-4,119 -10.2%	-5,652 -13.0%	-5,738 -12.3%	-6,717 -13.6%	-7,832 -15.0%	-6,338 -11.0%	-2,682 -4.8%	-4,597 -7.2%
충남	-178 -8.7%	-291 -13.0%	-290 -12.7%	-108 -5.2%	-209 -10.7%	-253 -12.7%	-325 -15.1%	-423 -18.0%	-514 -19.7%	-56 -1.8%	-85 -3.0%	-347 -10.9%

주 :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율은 차이 규모를 예산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시설사업 예·결산 차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예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결산이 지출되었음

지역별 시설사업 예·결산 차액 및 비율(2010~2021)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485 -3.6%	-31,706 -8.0%	-41,836 -10.0%	-24,024 -5.9%	-30,449 -7.9%	-52,053 -12.6%	-44,919 -10.2%	-62,236 -12.5%	-63,707 -12.6%	-43,456 -7.6%	-2,793 -0.5%	-61,749 -10.2%
충남	-93 -3.4%	-2,493 -9.1%	-2,946 -10.3%	-1,669 -6.1%	-1,685 -6.7%	-3,847 -13.8%	-1,785 -6.3%	-4,994 -15.5%	-2,843 -8.9%	-736 -2.0%	-693 -1.9%	-5,426 -13.1%

주 :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율은 차이 규모를 예산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지방정부의 ‘예·결산차액’은 ‘예산액’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더한 금액인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임¹⁾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예·결산차액 = 예산현액(=예산액+예산성립 후 증감액) - 지출액”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즉, ‘예·결산차액’은 각 사업에 배정되어 지출될 수 있는 최대 경비 한도에서 지출된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차기로 이월될 수 있는 대상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예·결산차액’은 ‘불용액(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천이 되므로,²⁾ ‘불용액’을 검토하기 앞서 ‘예·결산차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³⁾

1)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①전년도이월액, ②예비비사용액, ③이용액, ④전용액, ⑤수입대체경비액, ⑥변경액’의 합계로 구성됨

2) 불용액(집행잔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예·결산차액’에서 ‘차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하여 도출

- SOC 분야에 속한 세부사업에서 ‘SOC 예·결산차액’ 금액과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 금액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함. 그 이유는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계획 및 지출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SOC 예·결산차액’이 큰 세부사업에서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현상은 ‘SOC 예·결산차액’과 ‘시설사업 예·결산차액’의 지역별 분포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SOC 예·결산차액’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SOC에 속한 세부사업에서 계획된 예산에 비해 더 작은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공원) 보상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예·결산차액(1,861억원)은 주로 명시이월액(1,857억원)에 기인하는바, 이는 토지분할, 물건조사 지연 및 토지주 보상 협의 불용, 재결 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이월된 금액임
 - 또한, 대규모 예·결산차액(352억원)이 발생한 서울특별시의 또 다른 사업인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예·결산차액은 주로 사고이월액(349억원)에 기인함. 이는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용역, 관급자재비 등과 시공사의 공사비 물가상승분 협의 미신청으로 인해 이월된 금액임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별 SOC 예·결산 차액 비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역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비해 광역시(특별시 포함)에서 평균값이 대체적으로 더 작은 경향(절댓값 기준으로는 더 큰 경향)이 나타났음
 - 즉, 계획된 예산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결산액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광역도에 비해 광역시에서 훨씬 두드러졌음.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광역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광역시에만 존재하는 대규모 시설사업, 예컨대 대규모 광역 및 도시철도, 전철, 신교통수단(광역 BRT)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 오차에 기인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음

3)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부사업의 비목별 불용액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의 비목별 예·결산차액을 통해 계획된 예산 대비 과소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

지역별 SOC 예·결산 차액 비율의 평균값(2010~2021)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8.5%	-10.5%	-7.9%	-10.2%	-11.3%	-11.7%	-10.1%	-6.4%	-14.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9%	-7.2%	-7.6%	-8.1%	-6.6%	-7.7%	-8.0%	-6.9%	-4.8%

○ 시사점 및 결론

- SOC 분야 예·결산액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여 공공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축소와 더불어 어려워진 공공 건설사업 환경변화가 지속됨
- 한편, 전체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은 지속 감소하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함
-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었으며(2021년 기준), 특히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은 전체 예·결산 차액의 18.9%를 차지하여 나머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과 여전히 부족한 SOC 분야,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및 기회비용의 상실 지속 발생함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 발생이 다른 분야 대비 크게 나타나 예산 편성의 조정이 필요
 - SOC 분야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관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음
- 시설사업비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발생으로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의 기대효과가 축소됨
 - 경기 대응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정부 건설투자가 이루어지나 시설사업비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발생으로 당초 계획한 건설투자 효과가 반감됨. 중앙정부 시설사업비는 연평균 0.9조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6.2조원 가량의 예·결산 차이가 발생하여 공공 건설투자 효과는 당초 예산 편성 시의 기대효과보다 축소됨

- SOC 투자는 SOC 분야에 할당된 모든 예산이 시설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나, 실제로는 SOC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설사업비 이외에 다른 비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SOC 분야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설사업 관리체계는 시설사업 관리에 왜곡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SOC 예산 중심의 시설사업 관리체계는 시설사업 중심의 종합적 시각이 결여될 수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예산 투입의 효율성 향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설사업 거버넌스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SOC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사업 예산 중심의 새로운 관리적 시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시설사업 예산 거버넌스가 필요함
- 대내외 환경변화로 건설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성장을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함

출처: 엄근용·이준범·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3.10.)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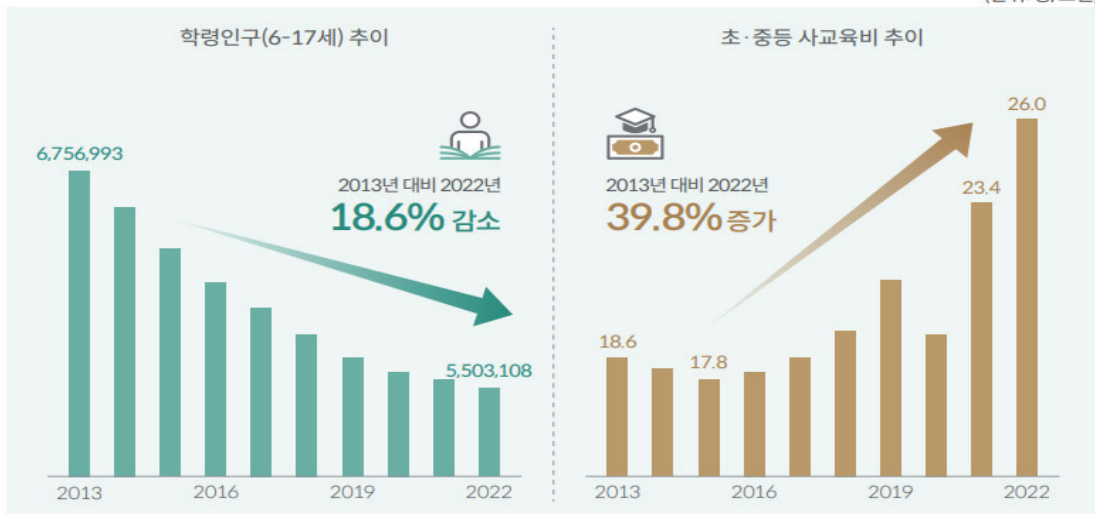
6.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우리나라 공교육은 보편성은 확보했으나,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높은 사교육 지출 초래
 - 2020년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15,148달러로 OECD 국가(38개) 중 6위이며, OECD 국가 평균 11,352달러보다 33.4%를 상회
 -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OECD 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읽기, 수학, 과학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하락 추세를 보임
 - ※ 읽기: 556('06년) → 514('18년), 수학: 554('12년) → 526('18년), 과학: 538('12년) → 519('18년)
 - 10년간('13~'22) 학령인구는 18.6% 감소하였으나 초·중등 사교육비는 39.8%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초·중등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 규모로 한해에만 11.1% 증가

[그림 1] 학령인구 및 초·중등 사교육비 추이

(단위: 명,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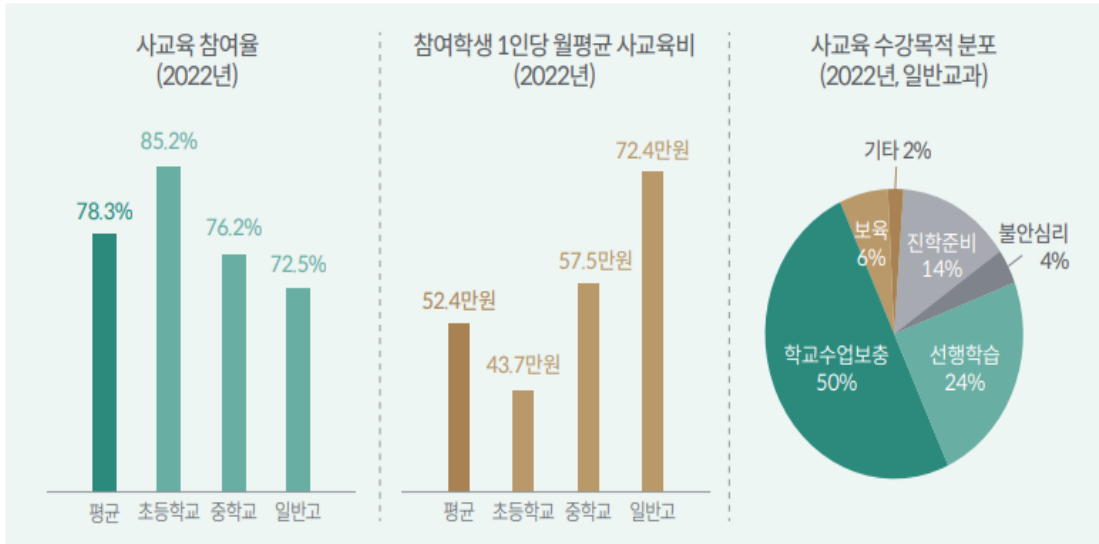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22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3%, 참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52.4만원이며, 일반고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72.4만원에 달함

◆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 보충 50%, 선행학습 24%, 진학준비 14% 등임

[그림 2] 2022년 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 수강목적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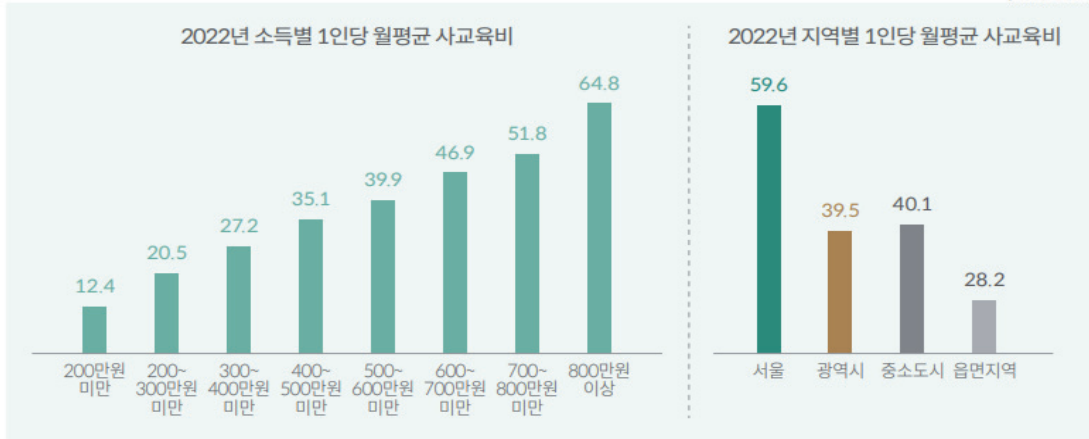
■ 소득수준·지역별 사교육 격차 문제

○ 초·중등 사교육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높아지며, 2022년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5.2배 수준
- 대도시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높아지며, 서울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읍면지역의 약 2.1배 수준

[그림 3] 2022년 소득수준·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 초·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필요성

○ 기존 공교육 패러다임은 평균 학생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사교육이 증가하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여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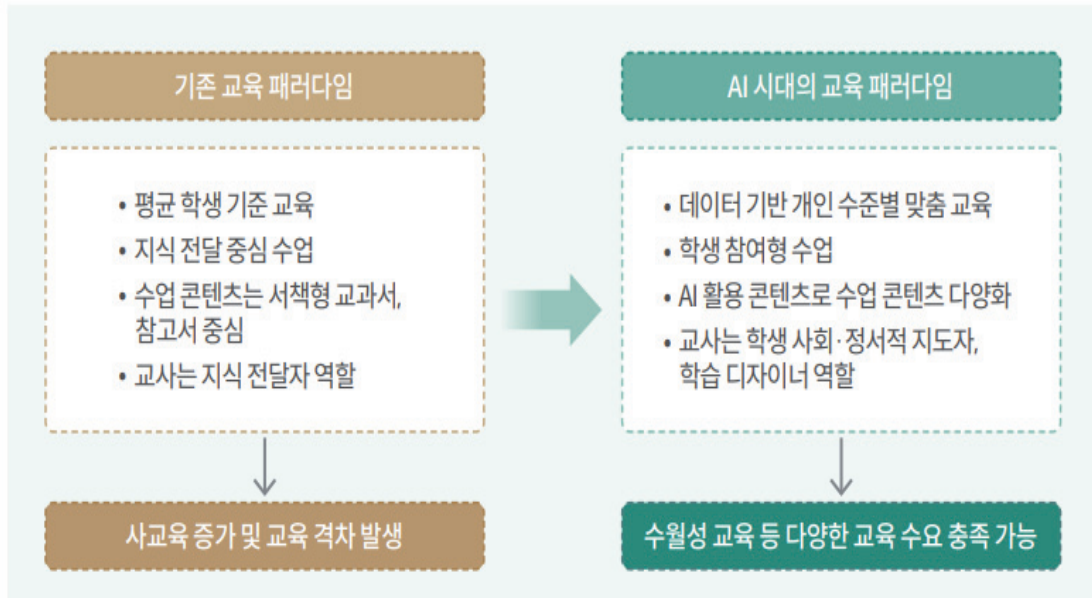
- 학교 수업은 평균 학생 기준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교육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학생은 학원을 통한 학교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 등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화형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이를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AI 시대의 교육에서는 현행 공교육에서 부족한 수월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챗GPT 등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
-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데이터 기반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고, AI 활용 콘텐츠로 수업 콘텐츠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교사는 학생의 사회정서적 지도자 및 학습 디자이너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 초·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

- AI 기반 공교육 혁신의 성공 여부는 초·중등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으므로, 교사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적용, 창의력 개발·토론형 학습의 기획·실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의 이해 및 활용 등 기초 역량부터 수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교육 지원
- 선도교사 그룹이 각 학교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 정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선도교사 집중 육성 지원 필요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당 1명 이상의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
 - 집중 연수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공교육 혁신의 주체라는 자긍심과 선도교사 간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공동체 운영, 해외 교육현장 시찰 기회 등을 지원
- 방과후 학교 AI 활용 교육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맞춤형·수월성 교육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교과 학습 및 진로 진학 지원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
 - ◆ 교과 심화과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 예능 및 체육 프로그램 등 지원
- 학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 방식에 대학, 기업, 단체 등 우수기관을 공모 선정 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통한 사교육 완화

■ 공교육 디지털 혁신 재원조달 방안

- 공교육 개혁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재원 마련 필요
 - 전국 단위 초·중등 교원 연수 표준 모델 개발·운영,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지역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
 - ◆ 현행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2.2조원)이며, 사용 용도에 따라 국가시책(1.3조원), 지역현안(0.7조원), 재난안전관리(0.2조원)로 구분
- 국회에서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이 2023년 8월 31일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
 -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
 - ※ 1%p 인상 시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원 재원 마련
 - 이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AI 맞춤형 초·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 6년 한시 적용으로 2030년부터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
 - 높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번(제410회)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 통과 필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66호」 재작성(2023. 11월)

Ⅲ.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11월말 기준)

○ (자체수입) '23년 11월말 기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 2조 9,225억원

- 목표액(3조 866억원) 대비 94.7% 징수율 (※ 10월 징수율 82.2%)

- 전년동기 징수액(2조 8,942억원) 대비 283억원 증가(1.0%)

○ (지방세) '23년 11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 2조 7,682억원

- 취득세는 9,590억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3.2% 징수율(※ 10월 징수율 85.7%)

- 취득세 전년동기 징수액(9,800억원) 대비 △210억원 감소

○ (세외수입) '23년 11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 1,543억원, 전년동기 대비 79억원 증가

('23.11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액 (B)	예산대비 징수율 (B/A)	전년동기 징수액(C)	전년대비 증감	
						금액 (B-C)	증감율 (B-C/C)
합 계		30,866	29,225	94.7	28,942	283	1.0
지 방 세	소 계	28,809	27,682	96.1	27,478	204	0.7
	취 득 세	10,291	9,590	93.2	9,800	△210	△2.1
	등 록 면 허 세	753	724	96.1	700	24	3.4
	레 저 세	225	201	89.3	193	8	4.1
	지 방 소 비 세	13,567	13,568	100.0	13,050	518	4.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063	1,035	97.4	1,070	△35	△3.3
	지 방 교 육 세	2,870	2,548	88.8	2,635	△87	△3.3
	지 난 년 도 수 입	40	16	40.0	30	△14	△46.7
	소 계	2,057	1,543	75.0	1,464	79	5.4
세 외 수 입	경 상 적 수 입	359	346	96.4	344	2	0.6
	재 산 임 대 수 입	22	20	90.9	34	△14	△41.2
	사 용 · 수 수 료	69	66	95.6	67	△1	△1.5
	사 업 수 입	63	64	101.6	75	△11	△14.7
	징 수 교 부 금 수 입	91	87	95.6	96	△9	△9.4
	이 자 수 입	114	109	95.6	72	37	51.4
	임 시 적 수 입	1,641	1,188	72.4	1,111	77	6.9
	재 산 매 각 수 입	31	31	100.0	117	△86	△73.5
	자치단체간 부담금	194	136	70.1	203	△67	△33.0
	보 조 금 반 환 수 입 등	1,416	1,021	72.1	791	230	2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	9	15.8	9	0	0.0
	과 징 금 등	57	9	15.8	9	0	0.0

-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본 정보지는 예산정책 관련 동향을 수집·가공한 자료이므로,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